28일 발기인대회 내달 6일 창당… 의원 18명 추진위 참여

<비례 3명 포함>

反통합파 '개혁신당' 로드맵 발표…쪼개지는 국민의당

"오늘부터 시·도당 창당 지방선거 돌풍 일으킬 것" 원내교섭단체 구성 따라 정계 4당 체제 재편될 수도

국민의당 내 통합 반대파가 21일 '개혁신당'(가칭) 창당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야당 발 정계개편으로 술렁거리고 있다. 호남 지역구 의원들이 바탕이 된 국민의당 내 개혁신당 추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28일 창당 발기인대회를 거쳐 내달 6일 '개혁신당'을 창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개혁신당 추진선언문'을 발표했다.

◇창당 일정=추진위는 선언문에서 "오는 28일 창당 발기인대회를 열 것"이라며 "또한 내달 4일 국민의당 전당대회에서 보수대야합을 강행하면, 같은 달 6일(개혁신당)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추진위 대표는 조배숙 의원이 맡기로 했으며, 장병완·유성엽 의원이 인재영입위원장, 김경진 의원이 창단기획단장, 김종회 의원이 조직위원장, 윤영일 의원이 정강정책위원장, 박주현 의원이 홍보위원장, 최경환·장정숙 의원이 대변인 역할을 각각 하기로 했다.

추진위는 "당 조직을 선거지원체제로 신속하게 전환해 6월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의 돌풍을 일으키겠다"며 "시도당 창당도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시도당 창당 추진위원장으로는 정호준 전 의원(서울), 부좌현 전 의원(경기), 허영 인천 서구을 지역위원장(인천), 고무열 대전 유성갑 지역위원장(대전), 김현식 천안병 지역위원장(충남), 김종회 의원(전북), 최경환 의원(광주), 정인화 의원(전남) 등이 맡았다. 또한 이들은 이날부터 신당 당명 공모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추진위는 "개혁신당은 민생·평화·민주·개혁을 지지하고 계파주의와 지역패권주의, 대결과 반목의 낡은 정치를 배격하는 모든 분들께 문을 활짝 열겠다"며 ▲분권형 개헌, 선거제도개편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한 정치혁명 ▲햇볕정책 계승 및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전폭적인 협력 ▲실천적 민생정당 ▲당내 민주주의 실현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당직 및 공직 진출 우선 배려 등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추진위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이 평양에서 출발, 개성과 도라산역, 서울·평창으로 오는 평창 평화열차 운영을 공식 제안했다.

◇규모는=이날 신당 추진 선언문에는 천정배·박주선·정동영·조배숙·박지원·유성엽·장병완·김광수·김경진·김종회·박주현·박준영·윤영일·이상돈·이용주·장정숙·정인화·최경환 의원(선수·가나다순) 등 모두 18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 중 비례대표 의원 3명을 제외한 15명의 의원이 신당에 합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명단에는 '중립파'로 분류됐던 박주선 의원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개혁신당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느냐 여부에 따라 정계가 3당 아니면 4당 체제로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의원들의 최종 선택이 주목된다.

조배숙 의원은 "저희가 (신당을) 출범하면 합류하는 분들이 늘어 나중에는 원내교섭단체 달성도 무난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물론, 반대파 안에서도 비례대표 의원들의 합류 없이 20명을 채우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탈당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는 의원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전제로 개혁신당이 정의당과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의견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정체성 차이는 있지만 선거구제 개편을 매개로 개혁신당과 정의당이 공동 전선을 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2008년에도 정체성에 차이가 있는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이 공동교섭단체인 '선진과 창조의모임'을 꾸린 전례도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는 국민의당 의원들과 당원들이 2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개혁신당 창당의 뜻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통합열차 합류냐 탈당이냐 고민 깊어가는 국민의당 중립파

국민의당의 '2·4 전당대회'가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당내 중립파 의원들의 선택의 순간도 초읽기에 돌입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바른정당과의 합당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양당 통합당으로 합류하느냐, 호남의원들 주축으로 창당 초읽기에 들어간 '개혁신당'으로 탈당해 옮겨가느냐, 무소속으로 남느냐 등 3가지 선택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과 곧 마주하게 되는 것이다.

중립파는 최근까지만 해도 중재 노력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안철수 대표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와 함께 통합선언을 한 순간을 기점으로 중재 카드는 날아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국민의당 내 중립파 의원들은 김동철·손금주·이용호·주승용·황주홍 의원 등 5명이다. 이들은 모두 아직은 거취와 관련해 말을 아끼고 있다. 박주선 의원의 경우 최근까지 중재파로 분류됐으나 안 대표와 유 대표의 통합선언후 개혁신당 합류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철, 이용호 의원의 경우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어 입장을 유보하고 있으나 결단의 순간에는 개혁신당에 합류할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손금주·주승용·황주홍 의원의 입장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중립파 의원 일부는 결단의 순간 양자택일(통합당, 개혁신당) 대신 무소속으로 남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당내 존재감이 큰데다, 이들 중립파의 행보가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 교섭단체 구성 등 정치적 영향력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양측 모두 중립파 설득에 사활을 걸고 있다. 통합찬성파와 통합반대파는 서로 중립파 의원들이 자신들과 뜻을 함께 할 것이라는 상반된 관측을 내놓고 있다.

통합찬성파는 통합개혁신당의 구심력이 커지고 컨벤션효과가 나타나면 중재파 대부분이 합류할 것이라고 자신하는 반면 반대파는 중재파가 호남 지역구 의원인 만큼 호남 민심 때문에라도 개혁신당을 선택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분위기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특단의 조치" "징계해 달라" 통합-반대파 가시돋친 여론전

바른정당과의 합당추진으로 분당 초읽기에 돌입한 국민의당 통합파와 반통합파는 휴일인 21일에도 가시돋친 설전을 주고받으며 여론전을 이어갔다.

이들은 서로 당내 중립파나 제3지대 인사들이 분당 이후 자신들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장담하는 등 주도권 다툼에 나서는 한편 서로를 "민주당 2중대", "적폐세력 2중대"로 부르며 날선 비판도 주고받았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유승민 대표와 서울의 한 커피숍에서 공동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안 대표는 이 자리에서 3지대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해 외연을 확장해 가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당내 중립파도 한 분이라도 함께 하도록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통합반대파들을 향해서는 강도 높은 비판을 날렸다. 그는 "통합 반대파들은 결국 민주당 2중대를 하자는 것이다. 당을 창당하려면 (국민의당을) 나가서 하는 것이 정상"이라며 "도를 넘는 행위를 한다면 묵과할 수 없다.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반통합파 비례대표 의원들이 제명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의 자산이므로, 마음대로 어떻게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제명 불가 원칙을 다시 밝혔다. 안 대표는 23일 유 대표와 함께 광주를 방문하기로 했으며, 이번 주 내에 영남 지역도 공동 방문하기로 하는 등 통합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통합반대파 역시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달 6일 개혁신당(가칭)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기로 하는 등 창당에 속도를 냈다. 이들은 특히 안 대표의 통합 반대파 비판에는 강력 반발했다.

창당추진위 최경환 대변인은 '당과 호남을 보수야합 불쏘시개로 전락시킨 안철수는 자중하라'는 논평을 내고 "적폐세력 2중대를 자처해 당원과 호남으로부터 버림받은 처지에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과연 누가 금도를 넘었나. 엄포만 하지 말고 제발 특단의 조치를 해주기 바란다"고 안 대표를 직격했다. /김형호기자 khh@

광주 2단계 민간공원 개발 중앙·중외·일곡·송정 확정

운암산·신용공원은 현장 점검후 추후 결정 개발면적 20% 조정 검토

공원 일몰제 대비 민관거버넌스 산하 공원조성소위원회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대상 공원으로 중앙공원, 중외공원, 일곡공원, 송정공원 등 4곳을 확정했다. 운암산공원과 신용공원에 대해서는 이번주 현장 점검 후 대상에 포함할 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공원조성소위는 지난 19일 회의에서 2단계 대상 공원의 경우 개발 면적을 1단계의 30%에서 더 낮추고, 개발 위치도 미리 정한 뒤 공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21일 "지난 19일 공원조성소위를 열고 2단계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 공원과 개발 규모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된 사항은 현장 점검, 민관 거버넌스 전체 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시는 오는 4월까지는 제안 공고를 낼 예정이다.

2단계는 1단계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계량 평가의 비중을 줄이고 비계량평가 배점을 높이는 방향도 검토될 전망이다. 소위에 참석한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은 '개발 면적 공원의 30% 미만'의 1단계 기준을 '20% 미만'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심도있게 논의했다. 공원의 매입비 및 조성비 모두를 업체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원을 매입해 시에 기부채납하도록 한 뒤 시가 기간을 정해 추후 예산으로 조성하도록 하면 개발 강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공원 내 개발이 가능한 대략적인 위치를 사전에 업체들에게 알려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1단계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경험을 살려 총분양가에서 토지매입비, 건축비, 공원 매입비를 제외해 공원별 사업이익을 산출, 심사를 좀 더 면밀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시 관계자는 "2단계와 관련해 현재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2월 초에 민관거버넌스 전체 회의를 가질 예정이며, 2단계 지침은 민관거버넌스가 정하는대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